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유학생 30만 명 시대,
유치만으로 충분할까?

- 대학, 일자리,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과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히 대학에 오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인재 후보입니다.

하지만 유치가 곧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지역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지금
유학생 유치를 말할까?

-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가 만났고, 유학생 구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유학생 유치가 국제화 전략을 넘어
학과와 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유학생 정책을 지역 산업 수요와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Study Korea 300K 목표

목표 시점	정부 유학생 유치 목표	정책 방향
2027년	**30만 명**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

한편, 유학생 구성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학사과정은 중국 비중이 줄고 베트남이 부상하는 등 국적이 다변화되었고,
석사·박사 등 고학력 과정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구성의 변화(2024년)

박사과정 외국인 비중	석사과정 중국 비중	학사과정 중국 비중	학사과정 베트남 비중
17% 이상	**49.1%**	**36.4%**	**27.2%**

유학생 정책은 대학 생존과 지역 인재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대학에는 기회일까, 부담일까?

- 재정을 위해 문턱을 낮추면, 부담이 시작됩니다.

유학생은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 입학 문턱(특히 한국어 능력)을 낮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지,
-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관리할지,
- 행정과 상담은 누가 맡을지,
- 내국인 학생과의 학습 갈등은 어떻게 줄일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내국인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이들은 유학생을 일자리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의 부담을 함께 나눌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한 학생이 같은 학위를 받는 '공정성' 문제와 대학의 부실한 선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합니다.

유학생 유치는
대학 재정의 해법이면서, 동시에 '선발과 교육 관리'의 시험대입니다.

유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을까?

- 현실은 '공부'와 '생계' 사이에 있습니다.

- 낮아진 입학 문턱과 높은 학비·부채는 많은 유학생을 재학 중 노동으로 이끕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노동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재정적 토대이자, 실용 한국어와 직장 문화를 익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 다만 문제는, 그 일이 전공이나 진로와 연결되기보다 생계를 위한 저숙련 노동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유학생 미신고 근로 비율	**41.9%**
아르바이트 선택 시 근로시간 우선	**54.4%**
아르바이트 선택 시 임금 우선	**24.8%**
아르바이트 선택 시 전공 연관성 고려	**2.4%**

유학생의 노동은
배움의 연장이 되기도, 생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건은 이 경험이 진로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왜 졸업 후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 '유학 - 취업 - 정주' 연결 경로가 필요합니다.

정책은 유학생이 한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생계형 저숙련 노동 경험은 졸업 후 희망 진로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역전'입니다.
재학 중 비공식 장시간 노동으로 버는 돈이 졸업 후 합법 취업 초기 소득(세후)보다 높아, 합법적인 취업·정주 경로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약해집니다.

한편, 기업의 수요는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보다 국내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며, 그 핵심 이유는 '한국어 소통 능력'입니다.

재학 중 비공식 장시간 노동 소득



월 250~300만 원

졸업 후 합법 취업 초기 소득



월 170~180만 원

K-Work 플랫폼 분석 구인 건수



677건

K-Work 비수도권 경상권 수요



34.4%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유학생 개인의 의지 부족만이 아닙니다.
비자, 임금, 전공, 지역 일자리가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유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 지역은 유학생과 '분리된 공존'이 아닌 '함께하는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 유학생이 늘어나면 대학가 원룸촌, 상권, 음식점, 생활공간도 바뀝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유학생이 임대시장과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소비자이자 노동력이 됩니다.
-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 주민과 유학생이 생활공간은 공유하면서도 관계는 분리되는 '분리된 공존'이 나타납니다.

분석 지역	서울 동북권, 부산 남구, 경북 경산시, 강원도
긍정적 변화	공실 해소, 임대시장 유지, 일부 상권·노동 수요 보완
주요 갈등	주거 분리, 상권 분리, 생활문화 갈등, 지역 정체성 우려
핵심 진단	경제적 의존은 커지지만 사회적 통합은 약함

유학생은 지역을 살리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준비된 인재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오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느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의 경로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열쇠는 '검증된 한국어 능력'입니다.
한국어는 학업 성공의 조건이자,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검증된 인재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별적' 접근입니다.

모든 단계의 전제 — 검증된 한국어 능력

01	02	03	04	05
				
한국어 능력 기반 선발 및 입학 책무성 강화	재학 중 학습·적응 지원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재학–졸업 연계 강화	졸업 후 취업·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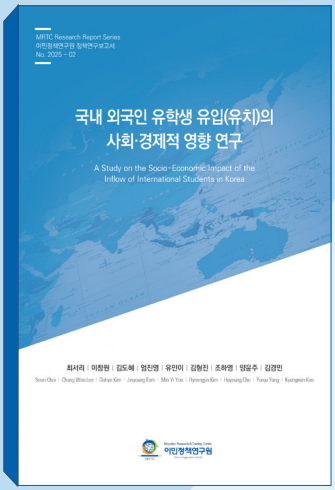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유치'보다 '연결'이며,
그 연결의 열쇠는 검증된 한국어 능력입니다.

유학생 30만 명 시대, 이제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유학–취업–정주를 잇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발간물 ➔ 연구보고서



No.2025-02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최서리 | 이창원 | 김도혜 | 엄진영 | 유민이 | 김형진
조하영 | 양윤주 | 김경민

=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1.php

최신연구자료 열람 | 정책자료 확인 | 통계자료 이용 | 연구성과 검색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기획관리팀(02-3788-8020, 8012)